

# 시의회 본예산 2089억 삭둑...광주시, 반발

### 7조1102억 의결...당초 예산안보다 2.9%↓

### 자치구 도로사업·노동인권회관 등 줄줄이 부동의

민선8기 들어 첫 편성한 7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중 2000억원이 삭감됐다.

집행부인 광주시는 필요사업을 포함해 20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심의권 남용, 화풀이성 심의"라고 반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동의를 거쳐 증액된 예산마저 부동의된 데 대해 "상임위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라톤 심의 끝에 상정한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수정의결했다.

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29개 실·국 예산안(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 비율로는 2.9%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7조94억원보다 1008억원(14%) 증가하는데 그쳤고 최종 예산 7조7316억원과 비교하면 6214억원(8%) 감소한 수치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400억원을 240억원으로 줄이는 등 7건에 1433억 5613만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입금 823억원이 삭감됐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80건에 걸쳐 2089억원이 삭감됐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3058억 원 중 823억원이 삭감됐다. "준공 시기 연기와 시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5·18구묘역 성역화 조성 사업비 3억9000만원, 5·18 출동 기증 장비 이전전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아시아 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비 12억 원도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모두 깎였다.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16억 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덕남정수장 동북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비 18억 22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됐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아인계엄 공동 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은 선형 연구용역인 주민 설문과 기반조사, 경제성·파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모두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사업비

도 모두 감액됐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비는 1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반토막났고, 공공무인자전거 '다랑개' 정거장설치비 3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 생존수영 교실과 비엔날레 호수공원 편시디 조성, 로고젝트를 활용한 안전하트길 조성사업 등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거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자치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8건(18억5000만원)의 경우 당초 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상임위 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돼 증액됐으나 시는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부동의했다. 시는 또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비 32억원도 부동의했고,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된 18건(12억원)도 부동의의 처리됐다. /김도기 기자

# 檢출석 박지원 "文·서훈, 삭제지시 없어"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그를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는 검찰과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원장 사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4~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듯,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이거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등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 등에 대해서도 "분석관의 분석을 몇 대적으로 신뢰한다"며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청문 보고서 채택... "큰 흠결 없어"

광주시의회가 14일 조익문(61)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경과를 보고했다. 시의회는 "직무 수행에 큰 흠결은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위원 7명 전체 명의로 된 A4 용지 16장 분량의 청문보고서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다.

특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가 오랜 민주화, 노동 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시각과 문제 해결 능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점은 중앙과 지방 정부, 정치·사회·문화·건설·교통 등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증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CEO 경험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3개월 이상 사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문보고서는 이날 강기정 시장에 전달됐고 강 시장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추최자 없는 행사 안전 지자체 책임" 조례 제정

'이대원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추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를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추최자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채 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상위 법령이나 정부 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광주시 차원의 선제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23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대원 참사는 컨트론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연발연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생활품질정책참여단 워크숍 14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생활품질정책참여단 워크숍에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참여단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00억 중부세 폭탄' 맞은 한전공대, 내년에도 또 납부 처지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안된 채 계류 중

올해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폭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에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한전공대에 부과되는 중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공대는 중부세가 전체 예산의 11%에 육박해 일약한 대학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

훈 의원이 발의한 중부세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부지의 경우 교육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부세 면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신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간혹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적을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 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체로 국회가 공회전 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전공대는 내년에도 중부세 납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다만 내년에는 학교 건축공사 부지가 더 늘어남에 따라 올해 납부한 100억원보다는 중부세 부과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면적 38만 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 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중부세 폭탄을 맞았다.

중부세 폭탄의 단초가 된 재산세는 나주시가 지방세특별제한법에 근거해 한전공대 측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4층짜리 1단계 개교 핵심시설(1255㎡)만 학교용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다.

# 박홍근, 최종 협상안 촉구... "거부시 수정안" "정부 작성 639조원 거의 그대로 인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여당에 최종 예산 협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합의 무산 시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한으로 최종 협상안을 요구하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

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짊어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 고금리 월세 부담으로 신용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놔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새 변이 BN.1 검출 한달새 5배 '경충' 주간 확진자 중 14.69%는 재감염...누적 81만여명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던 BA.5 변이 검출률이 지속 감소하는 대신 새로운 변이인 BN.1의 검출률이 최근 한 달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새로운 변이를 통한 유행 규모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

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난 10월 4주 이후 7주째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1.2% 증가한 41만2707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8958명이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4.69%로 직전 주 13.29%보다 증가했다.

지난 4일 기준 누적 확진자 2633만 876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3.09%인 81만6049명이다.

**호매민평**

이태현

개혁신

반개혁신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보상성 강화 비급여확대

태현

연구원은 리모델링 방향으로 역사적 공간의 원형보존, 전시·체험 공간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여행객과 지역민의 만남의 장 등을 제안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이뤄진 본관동에 여행자센터와 전시 공간(1층), 역사문화 창작소(2층), 게스트하우스(3층)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특히 5·18 당시 시민들이 나서 현행했던 상황을 추각·시각·청각을 활용한 3D 전시 공간으로 재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2층 역사문화 창작소는 5·18 예술치유센터를 운영, 지역 작가들이 5·18과 관련한 작품을 만드는 공방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